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검찰개혁 vs 조국 청문회

정의당·평화당·대안정치연대 “민생 국감 왜야” 조국 정쟁 비판

20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살살이 파헤쳐겠다는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철통방어로 정책 국감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감 기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등 검찰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조국 블랙홀이 국감까지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경제 국감·개혁 국감’ 기조를 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현석회의에서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개 기조를 바탕으로 국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보다는 검찰개혁 당론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번 국감에서는 ‘살리자 민생활력’ ‘만들자 경제강국’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버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조국 장관 관련 의혹들을 쟁점화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장관의 딸, 5촌조카 등 한국당이 신성한 핵심 증인들이 관찰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의 국감 방

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국 관련 증인 신청을 129명 요구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나마도 2명은 출석통지서를 거부했고 일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해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면서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이 정권의 국정실패를 결코 감출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감’을 제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제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감,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국감에 관심이 없다”며 “국감을 방해하는 자는 조국이다. 대통령이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 조국을 안자르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조국 국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정의당은 ‘조국 국감’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국감을 하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을 키워드로 잡았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산 불평등, 낙후지역 발전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국감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관련 정쟁은 보이콧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국감과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인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연대는 경제 민생 국감으로 차별화를 약속했다. 유성열 임시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할때 대안정치는 경제·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오늘 ‘패트 충돌’ 檢 자진출석... “항의 차원”

檢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 협조할 것으로 기대”
한국당 측 “피한다 인상 줄 필요없이 내 발로 간다 의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9월30일) 고소·고

발을 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1~4일 사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면서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은 ‘항의방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당시 사안의 본질, 원인은 불법 사보임”이라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조사하고 범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사 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당 의원들한테 소환장을 보내고 하니, 대표가 직접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자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없지 않나”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던데, 수준 떨어지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내가 간다, 내 발로(간다). 조사할 것으면 날(먼저) 하라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왔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조사에도 불응한다는 단문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의회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막아섰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이 결국 “감금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연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檢 개혁’ 탄력받은 조국 인사권 적극활용 진용 갖춘다

‘총장 측근’ 분류 대검 검찰본부장·사무국장 선정작업

취임 직후부터 인사권을 앞세워 검찰통제를 강조해 왔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인사권 행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의 연장선 상에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 요직을 법무부와 가까운 인사로 채워 검찰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3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검찰청 검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해 제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인선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본부장 인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장직은 검찰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검찰본부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자리다. 대검 검찰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19일 정병하 전 검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퇴임한 뒤로, 사무국장 자리는 지난 8월30일 김영창 전 사무국장(이 퇴직한 뒤로 계속 공석이다).

검찰본부장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검참모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무국장 역시 검찰의 ‘실질 실이’를 도맡는 자리인 만큼 검

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검 내 요직이자 검찰총장의 측근 자리로 여겨지는 두 직책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조 장관이 본격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견제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높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두 요직 인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비(非) 검찰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 취임 첫 행보를 인사권 행사와 함께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중간·고위간부 인사 이후 공석인 고검장 및 검사장급 6자리 후속인사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인사를 비롯,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10월 인사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같은 관측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5년 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현재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연이 예방화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